취임 1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듣는다

"교사 간접체벌 허용 검토 하겠다"

지역 대표 '거점학교' 육성
학교 통폐합은 자연스럽게
교직원 업무·근무여건 개선

도서 근무교사 인센티브
2014년 모든 학교 무상급식
개인 성과급은 폐지해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앞둔 27일 "지금 인재육성과 학교살리기에 나서지 않으면 전남공동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도시로 빠져나가는 인재를 붙잡고 전남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승적 고민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를 '거점학교'로 집중 육성해 교육수준을 높이고 자연스레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등 교육체질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장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취임 1년을 맞는 소감은.

▲1년간 전남도민이 바라는 전남교육개혁 과제의 방향, 틀, 장기발전과제 마련에 전력했다. 이제 교육 현장 속으로 들어가 교육 주체와 소통하고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학교와 교사를 지원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겠다.

-향후 역점 추진 현안은.

▲특성화고(전문계고)를 중심으로 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다. 2020년까지 전남 학생수가 30% 정도 줄고 농어촌 학교는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 미래교육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학교 통폐합이 돼야 한다. 지역민 반발도 있겠지만 학생, 학교, 지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할 사안이다. 통폐합 방침은 선택과 집중이다.

전남형 혁신학교인 무지개학교 활성화, 교직원 업무경감, 근무여건 개선 등도 역점사업이다.

-거점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나

▲지역 학생 이탈을 막기 위한 교육환경 구축, 교육과정 정상화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우수 특정 중·고교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지역의 기숙형 거점학교는 학생 개별 학력관리 프로그램 도입 등 학습능력 향상과 진로교육 기능 강화 등을 맡는다.

-해묵은 과제인 학력신장 방안은.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결국 전남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거점학교 육성, 교원인사 체계 개편 등 현재 추진중인 사업·현안이 모두 학력신장을 위한 것이다.

-교육장 공모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역교육청 인사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긍정 효과를 거뒀다. 향후 개선방안으로 2차 심층면접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1차 서류심사는 심사전문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여 일관성과 밀도를 높여 시행할 예정이다.

-교원인사 시스템에 큰 변화를 줬는데.

▲교원의 생활안정과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검토, 바람직한 인사방안을 만들겠다.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공감하는 안이 마련될 것이다.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복안은 있는가.

▲유능한 교사가 농어촌에 가서 근무하는 동안 얼마만큼 열정적이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다. 농어촌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제도의 보완과 다양한 인센티브, 사택보급 등 주거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 도서벽지에 '한지(限地)형교사'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배치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무상급식 1단계 추진 계획은 2012년까지 읍지역 이하 유(공립)·초·중 및 100명 이하 고등학교와 전체 특수학교를 목표로 했다. 올 현재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2단계(2013년)는 전체 유(공립)·초·중·특수학교 및 읍 지역 이하 고교까지, 3단계(2014년)는 전남의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다.

-교원 성과급 지급방식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실적과 성과에 따라 보상과 우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교육계도 마찬가지다. 차등 성과급으로 교원들을 견인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개인성과급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신 지표를 새롭게 개발하여 학교 성과급으로 가야한다.

-학교 통·폐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통·폐합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미 많은 학교가 통폐합됐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통폐합보다는 학교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에 담길 내용은.

▲지금까지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교사의 직접체벌은 엄격하게 금하되,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교육목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학교구성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다.

-밤 11시50분까지인 고등학교 학원교습시간 재개정 여부는.

▲학원교습시간 조례 제정과 관련해 고등학생 교습시간 문제는 유감스럽다. 기회가 되면 다시 추진할 생각이다.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는.

▲시국선언 교사는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징계와 관련해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행정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 민노당 후원금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가 내려질 것이다.

-전교조의 교육 정책 비판에 대한 입장은.

▲전교조든 교총이든 교육감이 잘하는 것은 지지와 격려를 해줄 것이고, 잘 못하는 것이 있으면 반대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본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을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U대회 남북단일팀 성사될까

지원 특별법 소위 통과… 29일 본회의 통과될 듯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는 27일 "이날 국회 국제경기유치 및 지원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제출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통과돼 특위 전체회의에 넘겨졌으며, 이 법안에는 남북체육교류 증진 차원에서 남북단일팀 구성을 협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U대회에 남북체육교류와 단일팀 구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생겼으며 법안은 28일 특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남북체육교류와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광주U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이 대회 성공은 물론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오는 9월 방한하는 유네스코의 데이비스 헵번 의장을 비롯해 유엔과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아나콘다 전남에서도 볼 수 있다

함평에 국내 최초 뱀 생태공원 내년 3월 개관

몸 길이가 4m가 넘는 아나콘다를 전남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내년 3월 함평에서 문을 여는 국내 최초 뱀 전문 생태공원에 아나콘다 등 희귀종들이 대거 선을 보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27일 전남도와 함평군 등에 따르면 함평 자연생태공원 인근에 1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뱀과 악어 등 파충류를 전시하는 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들여 추진 중이다.

함평군 신광면 자연생태공원 인근에 들어서는 뱀 생태공원에는 뱀 생태관과 공연·전시·판매 사육장, 파충류 전시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 93종 472마리의 파충류가 입식된다.

전남도와 함평군은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 파충류인 아나콘다 2~3마리를 들여오는 한편, 악어 등도 생태공원에 전시할 예정이다. 아나콘다가 입식되는 초대형 뱀 모양 주제관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향토수종을 식재해 자연 형태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연출할 계획이다.

외국 동물의 국내 입식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전시관 공사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달 생태관 문을 열 예정이다.

전남도는 뱀이 가지고 있는 독성분을 산업화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 생태공원과 함께 수익사업 창출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공원을 제외하고 파충류 전문 생태공원으로는 함평이 국내 처음"이라며 "공원이 문을 열면 인근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려대교 조기착공해 달라"

전남·경남 단체장·국회의원, 靑 등에 건의문

전남 및 경남지역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여수와 남해를 연결하는 (가칭) 한려대교 건설사업의 조기착공에 공동 협력키로 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두관 경남지사, 김충석 여수시장, 정현태 남해군수, 김성곤(민·여수갑)·주승용(민·여수을)·여상규(한·남해·하동)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희태 국회의장 등 8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올해 국비 예산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을 반영시켰으나, 정부는 한려대교가 제3차 국토건설 5개년계획 검토대상사업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일괄예비타당성 조사만 벌이고 있을 뿐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한려대교가 동서통합과 상생,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올해 책정된 한려대교 기본계획수립 예산을 빠른 시간내에 집행하고 후속 절차에 착수해 달라"고 건의했다. 여수시 낙포동과 남해군 서면을 연결하는 한려대교는 길이 4.2㎞, 폭 4차로로 건설될 예정이며, 완공되면 1시간 30분 이상인 소요시간이 10분대로 단축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檢, 서갑원 전 의원 소환

저축銀 3천만원 수수 혐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갑원(49) 전 민주당 의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서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초동 대검 청사에 도착, 금품수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돈 받은 적 없다. 보도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하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에게서 "2008년 10월 전남 순천시의 박형선(59·구속기소) 해동건설 회장 별장 앞에서 서갑원 의원에게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